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

공사 관련 언론보도 스크랩

2021년 07월 16일

농어촌公 경북의성고운마을, 대한민국 국토대전 공모전 수상

[김용훈]



한국농어촌공사는의성군과함께 2021년 대한민국 국토대전에 경북 의성고운마을을 출품해 우수한 기능과 디자인의 주거상업무단지 분야 학회장상을 수상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파이낸셜뉴스] 한국농어촌공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21년 대한민국국토대전"에 "경북 의성 고운마을"을 출품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2021년 대한민국국토대전"은 "품격 있는 국토, 아름다운 경관"을 슬로건으로 우리나라 국토,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꾼 사례를 발굴하고 평가하는 시상식이다. 공사와 의성군은 도시·농촌·자연의 문화경관, 활력 있는 가로와 광장 등 총 9개 분야 중 "우수한 기능과 디자인의 주거·상업·업무단지"분야에 공동 응모했다.

경북 의성 고운마을은 귀농귀촌의 수요를 바탕으로 한 체류형 농촌 마을모델로서 건축·조경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이상적 농촌마을을 구현한 사례다. 이번 공모전에서 고운마을은 아름답고 창의적인 경관을 조성하여 농촌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와 함께, 지역주민과 공공부문 협업을 통해 우수한 디자인의 주거단지를 조성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일원에 조성된 고운마을은 2016년 농식품부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지구로 선정되면서 의성군에서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일괄 수탁해 추진했다. 단지 내에는 체류형 농장 25세대, 커뮤니티 시설 3개동, 캠핑 방갈로 15개소, 사이트 25개소 및 야외잔디마당이 조성됐으며 총 112억원(국비 56억, 군비 56억)의 예산이 투입됐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는 아름다운 국토공간 조성을 위해 토목, 건축, 조경,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사업추진에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며 친환경, 비용절감, 사회적약자 배려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다.

2018년 시설준공 이후 현재는 고운마을 협동조합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8월부터 본격 운영한 캠핑장에는 현재까지 3000여 명이 방문했다. 임대주택과 캠핑장이 도시민에게 인기를 끌면서 지역농가 농산물 직거래 등이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인식 사장은 "이번 수상으로 농촌 경관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사에서는 농촌 고유의 아름답고 매력적인 공간조성을 통해 품격 있는 국토 경관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농촌이?...'경북 의성 고운마을' 국토대전서 수상

[김덕준]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일원 조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일괄 수탁해 추진



2021년 대한민국국토대전에서 '경북 의성 고운마을'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상을 수상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경북 의성의 한 농촌마을이 대한민국 국토대전 공모전에서 '매우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수상을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21년 대한민국국토대전'에 '경북 의성 고운마을'을 출품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대전은 우리나라 국토와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꾼 사례를 발굴하고 평가하는 시상식이다.

경북 의성 고운마을은 귀농귀촌 수요를 바탕으로 한 체류형 농촌 마을모델로, 건축 조경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이상적 농촌마을을 구현한 사례다.

이번 공모전에서 고운마을은 아름답고 창의적인 경관을 만들어 농촌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와 함께, 지역주민과 공공부문 협업을 통해 우수한 디자인의 주거단지를 조성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일원에 조성된 고운마을은 2016년 농식품부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지구로 선정되면서 의성군에서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일괄 수탁해 추진했다.



단지 내에는 체류형 농장 25세대, 커뮤니티 시설 3개동, 캠핑 방갈로 15개소, 사이트 25개소 및 야외잔디마당이 조성됐으며 총 11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농어촌공사 제공

단지 내에는 체류형 농장 25세대, 커뮤니티 시설 3개동, 캠핑 방갈로 15개소, 사이트 25개소 및 야외잔디마당이 조성됐으며 총 11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는 아름다운 국토공간 조성을 위해 토목 건축 조경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시켰으며 친환경, 비용절감, 사회적약자 배려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다.

2018년 시설준공 이후 현재는 고운마을 협동조합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8월부터 본격 운영한 캠핑장에는 현재까지 3000여 명이 방문했다. 임대주택과 캠핑장이 도시민에게 인기를 끌면서 지역농산물 직거래 등이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농어촌공사·의성군 조성한 '의성 고운마을', '2021 대한민국국토대전'서 수상

[김소영]



한국농어촌공사와 경북 의성군과 공동조성한 '의성 고운마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상 수상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경북 의성군과 함께 조성한 '의성 고운마을'이 '2021년 대한민국국토대전'에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2021년 대한민국국토대전은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건축공간연구원이 '품격 있는 국토, 아름다운 경관'을 주제로 우리나라 국토와 도시 경관을 잘 가꾼 사례를 발굴·평가하는 행사다.

농어촌공사와 의성군은 전체 9개 분야 중 '우수한 기능과 디자인의 주거·상업·업무 단지' 분야에 고운마을을 공동 출품했다.

고운마을은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일원에 조성한 곳이다.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지구로 선정되면서 군이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공사가 사업을 일괄 수탁해 추진했다.

사업비 112억원(국비 56억원, 군비 56억원)을 들여 체류형 농장 25세대와 커뮤니티 시설 3개동, 캠핑 방갈로 15곳, 사이트 25곳, 야외잔디마당 등을 지었다. 특히 공사는 친환경, 비용 절감, 사회적 약자 배려 같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2018년 준공 이후 고운마을협동조합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본격 운영한 캠핑장에는 현재까지 3000여명이 찾았다. 방문객과 농가간 농산물 직거래도 늘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있다. 공모전에선 아름다운 경관으로 농촌지역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와 함께 조성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협업 등을 인정받았다.

김인식 사장은 "앞으로도 농촌 고유의 아름답고 매력적인 공간을 가꿔 국토 경관의 품격을 높이는 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spur222@nongmin.com

동일기사 매체리스트

2021년 07월 16일 (금)

순서	제 목	매체
1	농어촌공 경북의성고운마을, 대한민국 국토대전 공모전 수상	파이낸셜뉴스
2	이렇게 아름다운 농촌이?... '경북 의성 고운마을' 국토대전서 수상	부산일보
3	농어촌공사 의성군 조성한 '의성 고운마을', '2021 대한민국국토대전'서 수상	농민신문
4	농어촌공 경북의성고운마을, 대한민국 국토대전 공모전 수상	부산파이낸셜뉴스
5	농어촌공사, '경북의성고운마을' 대한민국 국토대전 공모전 수상	KNS뉴스통신
6	농어촌공사 의성고운마을, 국토대전 공모전 수상	중소기업신문
7	농어촌공사, 국토부 공모 경관조성 우수사례 수상	머니S
8	한국농어촌공사 체류형 농촌모델 경북 의성 고운마을, 대한민국 국토대전 공모전 수상	이뉴스투데이
9	농어촌공사, 체류형 농촌모델 경북의성고운마을 국토대전 공모전 수상	CNB뉴스
10	농어촌공사 체류형 농촌모델 경북의성고운마을, 대한민국 국토대전 공모전 수상 !!	NGTV
11	한국농어촌공사 체류형 농촌모델 경북의성고운마을, 대한민국 국토대전 공모전 수상	빛가람뉴스
12	한국농어촌공사, '체류형 농촌모델 경북의성고운마을' 대한민국 국토대전 공모전 수상	광주일등뉴스
13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고운마을, 대한민국 국토대전 수상"	매일신문
14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민국 국토대전 공모전서 수상	데일리한국
15	한국농어촌공사, '2021년 대한민국국토대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상 수상	이코노믹포스트
16	한국농어촌공사, 2021 대한민국 국토대전 공모전 수상	뉴스워커
17	체류형 농촌모델 경북의성고운마을, 대한민국 국토대전 공모전 수상	농촌여성신문
18	의성고운마을, 대한민국 국토대전 수상	일간경북신문
19	[뉴스투데이 E] 한국농어촌공사, 체류형 농촌모델 '경북 의성 고운마을' 대한민국 국토대전 공모전 수상	뉴스투데이
20	농어촌공사 체류형 농촌모델 의성고운마을, 대한민국 국토대전 공모전 수상	글로벌뉴스통신
21	농어촌공사 체류형 농촌모델 '의성 고운마을', 대한민국국토대전 공모전 수상	아시아뉴스통신
22	농어촌공사, 체류형 농촌모델 의성 고운마을	세명일보
23	농어촌공사 체류형 농촌모델 경북의성고운마을, '대한민국 국토대전 공모전' 수상	충청뉴스
24	농어촌공사 체류형 농촌모델 경북의성고운마을, 대한민국 국토대전 공모전 수상	월간친환경
25	농어촌공사 체류형 농촌모델 경북의성고운마을, 대한민국 국토대전 공모전 수상	매일일보

26	농어촌공사 체류형 농촌모델 경북의성고운마을, 대한민국 국토대전 공모전 수상	호남투데이
27	농어촌공사 체류형 농촌모델 경북의성고운마을, 대한민국 국토대전 공모전 수상 @@	일간투데이
28	농어촌공사 체류형 농촌모델 경북의성고운마을, 대한민국 국토대전 공모전 수상	데일리한국
29	농어촌공사 체류형 농촌모델 경북의성고운마을, 대한민국 국토대전 공모전 수상	여성소비자신문
30	농어촌공사 체류형 농촌모델 경북의성고운마을, 대한민국 국토대전 공모전 수상	남도매일
31	농어촌공사 체류형 농촌모델 경북의성고운마을, 대한민국 국토대전 공모전 수상	일요서울
32	농어촌공사 체류형 농촌모델 경북의성고운마을, 대한민국 국토대전 공모전 수상	메트로신문
33	농어촌공사 ,체류형 농촌모델 경북의성고운마을 대한민국 국토대전 공모전 수상	경안일보
34	농어촌공사, 체류형 농촌모델 경북의성고운마을 출품해 대한민국 국토대전 공모전 수상	뉴스웨이
35	농어촌공사, '체류형 농촌모델' 경북의성고운마을 대한민국 국토대전 공모전 수상	빅데이터뉴스
36	농어촌공사, '의성 고운마을' 국토대전 공모 수상	서울일보
37	농어촌공사 대한민국 국토대전 공모전	한국교통신문
38	농어촌공사, '경북의성고운마을' ... 국토부 주관 '대한민국 국토대전' 수상	시사매거진
39	농어촌공사 경북의성고운마을, 대한민국 국토대전 공모전 수상	팩스넷
40	경북 의성 고운마을, '대한민국 국토대전' 공모전 수상	라이브팜뉴스
41	의성고운마을, 아름다운 농촌으로 변신	경상투데이
42	농어촌공사 체류형 농촌모델 경북의성고운마을, 대한민국 국토대전 공모전 수상	경북신문
43	농어촌공사, 대한민국 국토대전 공모전 수상 영예	천지일보

[기고]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추진

안중식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장



안중식 농어촌공사 충남본부장,

[이상선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고 ESG 지속가능 일자리창출을 위해 청년농업인에게 창업자금 마련 기회와 안정적 시설운영 역량을 제고 할 경영실습임대농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경영실습임대농장은 지자체 보유 농지 및 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임대온실을 신축해 저렴한 비용으로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하기 때문에 청년농업인이 자본투자 없이 운영경험 및 영농기술을 습득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온실은 일반 온실뿐만 아니라 ICT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온실을 설치함으로써 자동제어도 가능하도록 마련하고 있다. 사업비 지원형태는 국비 50%, 지방비 50%며, 임대대상은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만18세이상~만40세미만)으로 한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충남지역의 농가인구는 2018년 12만3480명에서 2019년에는 11만9903명으로 약 3%나 감소했고, 고령화의 심각성으로 청년농업인들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영농기술 및 경험 부족, 시설투자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영농생활에 쉽게 발을 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 경영실습임대농장을 추진했으며, 미래농업을 책임질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할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24지구를 준공했다. 농어촌공사는 사업 전반에 대한 위탁 시행 기관으로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문가들이 관리·감독하고 있다.

특히 올해 충남지역에서 선정된 사업대상지 총 8곳(금산2, 논산6)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일괄수탁 받아 경영실습임대농장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농기반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들은 경영실습임대농장을 통해 영농계획, 재배, 판매 등 모든 영농과정을 직접 경영해 실습해 볼 수 있다.

청년농업인들은 농업경영 및 재배기술을 습득해 성공적인 창업농으로 성장하고, 소득증대와 농업분야 창업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농촌의 희망인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과 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더욱 발굴되길 바란다.

농어촌공사 충북본부 소상공인 중소기업 임대료 감면 연장

[청주CBS 맹석주 기자]



농어촌공사 충북본부. 농어촌공사 충북본부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김규전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임대료 감면 및 동결 등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 시행 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해 사용 중인 영업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지원 규모는 월임대료 50%감면이나 다음 차수 1년간 임대료 동결하거나 확진자 발생, 방문으로 인한 임시 휴업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동안 임대료 면제나 임차인 희망시 계약기간 연장을 해 주기로 했다.

농어촌공사 충북본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개 소상공인에게 52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해 왔다.

규전 본부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전북4-H 육성 협력 약속

[김상원]



(사진 가운데) 정재호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사진 왼쪽 두번째) 양정희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한국4-H본부 방덕우 회장과 전라북도4-H본부 강순후 회장, 주승균 사무처장, 전라북도4-H연합회 고보민 회장은 4-H운동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12일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를 방문해 4-H운동의 육성협력을 요청했다.<사진>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정재호 본부장은 "4-H는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에 따른 국가가 보호하는 단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띄운뒤 "농협과 4-H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4-H와 농협의 협력을 약속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양정희 본부장은 "4-H와 같이 청소년과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있는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서 농업인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활성화해 공사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있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농업·농촌에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4-H와 같은 단체들이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순회를 통해서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청소년과 청년농업인 육성하는 전북4-H본부에 지원금과 함께 시상 지원을 약속했다.

방덕우 회장은 "4-H운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4-H본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순방을 통해서 지역4-H본부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향후 다른 지역 순회를 통해서 지역4-H본부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뷰] 김남표 농어촌공사 청양 지사장, "청양 농업발전 초석 될 것"

☎ 최형순 기자 | Ⓞ 승인 2021.07.16 01:51

|"농업인과 함께 청양농업농촌을 발전해가는 데 초석이 될 것"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 김남표 지사장은 충청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농업인과 함께 청양농업농촌을 발전해가는 데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표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장

그러면서 "청양지역 발전과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데 최우선 역점을 두고, 건설현장에서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등에 대한 김남표 지사장과 일문일답이다.

Q. 지사장 취임후 역점과제는?

☞ 청양지사로 취임하여 지난 6개월 동안 지역농업인들과 자주 만나 소통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영농불편사항과 현안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듣는데 주력했다.

아울러 청양군 및 군의원과 운영대의원들과 수시로 접촉하고 마을이장단 회의에도 참석하여 지역농민들의 어려움과 관심사를 경청하며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초에 국회에서 통과되는등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양지사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저수지 또는 배수장 주변에 현장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Q. 상반기 주요성과는?

☞ 첫째, 지역농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대치면소재 시전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14,449백만원) 신규착수지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농업용수 부족으로 영농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대치면 시전리, 수석리, 농소리 일원 농경지 86ha에 저수지 1개소,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용수확보 및 농업용수 공급과 관개시설물 구축을 통해 영농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자원확보로 대치면 지역의 상습가뭄을 해소하고 농업용수 공급을 통해 지역농민들의 영농편의를 도모할수 있게 되었다.

둘째, 적곡지구 배수개선사업(15,600백만원) 신규기본조사지구로 선정되어 청남면 인양리, 대흥리 일원에 배수펌프와 제진기 설치 및 배수문 보강, 중앙배수로 정비등을 통해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영농환경을 조성할수 있게 되었다.

세째,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한 청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성공적인 준공으로 젊고 활력있는 청춘거리를 조성하였다.

특히, 버스터미널을 리모델링하여 전시관을 설치하고 공연장 및 노래연습실에서 문화활동을 할수 있게 조성하였다. 또한 입간판 및 골목길 정비를 통한 지역경관 개선으로 노후화되었던 공간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청양의 새로운 문화중심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넷째, 신활력플러스사업(사업비 70억원)을 주민들이 직접 사업계획 수립부터 시행, 정산까지 담당하는 '청양형 주민주도방식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청양군 중간지원조직인 신활력플러스사업단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역특성과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선진사례로 평가받아 많은 시·군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꾸준히 청양을 찾고 있다.

Q. 농지은행사업의 진행사항은?

☞ 쌀은 우리의 주식이며 식량안보의 최후보루로써 쌀산업의 육성과 농업·농촌 지속발전은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근간이기도 하다.

올해 청양지사는 농지은행사업비 7,202백만원을 확보하여 농가경영규모확대와 소득증대,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지원 및 노후생활 안정등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는 농지은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업비 규모가 많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영농은퇴나 이농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상속농지소유 비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영농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으로서, 임차인 선발시 청년창업농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영농기반이 부족한 젊은 농업인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2030세대등 젊은 농업인 육성이라는 정부 농업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공공임대용 매입비축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농지은행사업 홍보 프랭카드 게시 및 이장단회의 통한 사업설명회 개최 등 선택적 집중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Q. 지역사회공헌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지난 5월말 남양면소재 멜론농장에서 "코로나19 극복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직원 20여명이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농촌인력 부족으로 고심하는 농가를 찾아서 멜론지지대 설치 및 비닐덮개작업 등을 실시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6월초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양전통시장상인회(회장 심준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매월 1회이상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직원들이 청양전통시장 물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매주 1회이상 "식사투어"를 실천하고 있다.

전통시장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고 시장상인등 지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말에는 독거노인 "농촌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청양군 목면소재 낚고 노후된 농촌주택을 찾아 직원들이 힘을 합쳐 단열공사 및 도배작업과 농가주변 잡초제거 및 쓰레기 수거등을 실시하며 사회공헌활동의 보람을 느꼈다.

하반기에도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가정을 찾아 지붕개량, 담장보수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연말에는 김장 담그기, 보일러 설치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참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어 가는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형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시사, ESG경영(포용사회) 실천

[파주/허윤 기자]

농촌 집 고쳐주기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시사(지사장 이희억)는 지난 12일부터 15일 나흘간 파주시 파주읍 소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가정 노후주택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 고쳐주기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였다.

해당 주택은 낡고 오래된 9평 규모로 싱크대 및 바닥공사와 처마 등을 보수하였다. 집주인은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공사 직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하며, 새 집 같아 너무 좋다고 기뻐했다.

이희억 지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ESG경영(포용사회) 실천을 위해 노력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수도권일보 (www.sudokw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매일 2021년 7월 16일 금요일 014면 사람 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 '농촌 집 고쳐주기' 사회공헌활동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지사장 최은석)는 지난 14일 청송군 진보면 신촌리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농촌 집 고쳐주기'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재능기부를 통한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선도

[박보성]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는 15일 오감오촌커뮤니티센터에서 예산군 내 마을리더(위원장 및 사무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능기부로 강의를 진행했다.

마을리더 교육은 (사)예산군 행복마을네트워크(센터장 오윤석)에서 주관하는 예산군 내 위원장 및 사무장 교육으로 권역센터 운영사례, 위원장·사무장의 역할과 운영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번 교육의 전문가로 강의를 요청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는 예산군 및 주민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다년간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하여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별 특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강의는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서 농어촌개발 컨설턴트 자격증을 보유한 김종봉 차장이 △지역개발사업의 이해 △ 행정기관, 공사, 주민들의 역할 및 갈등 관리방안 △타 커뮤니티 운영사례 등 15년간의 지역개발사업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교육했다.

강의가 끝나고 김종봉 차장은 "갈등은 부부관계와 같다. 서로 오해가 아닌 이해와 배려를 통해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다"라며 강의 소감을 말했다.

윤태경 예산지사장은 "이번 마을리더 교육이 교육 뿐만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장이되어 성공적인 지역개발사업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는 지역개발 전문기관으로서 예산군 내 농어촌 마을의 부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보성기자

김제시, 디지털 농업 확대방안 모색 간담회

김제시는 1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박준배 시장을 비롯 농업기술센터 김병철 소장 및 (주)KT, 농어촌공사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에 대응한 디지털 농업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류평 KT 전남·전북 법인고 객본부장이 기존 농업용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의 비전을 제시하고, KT·농어촌공사·김제시 간 협력 방안

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후, KT가 부량면 일원에서 연구 중인 스마트 물꼬 시험연구 포장에서 시연하는 시간을 병행해 가졌다.

박준배 시장은 환영사에서 “김제시는 농촌진흥청과 백산면 일원에 자동 물꼬 기술이 투입된 벼 디지털농업 실증연구를 하고 있으며, 오늘 행사로 김제시가 디지털 농업으로 발 빠르게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동서고속철 사토 노루목저수지 매립 추진

농어촌공사, 시공사와 협의 중
성토 완료 땀 지가 300억원 이상
시 매입 협의 한달째 진척없어

농어촌공사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1공구 공사 이후 발생한 사토로 노루목저수지를 매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토지 가치가 상승, 노루목저수지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춘천시도 뒤늦게 매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용도폐지 후 4년간 방치됐던 노루목저수지가 새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된다.

15일 본지 취재 결과 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등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1공구 공사로 발생하는 사토로 노루목저수지를 매우는 방안을 동서고속화철도 시공사 측과 협의 중이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1공구는 춘천역 지하에서 출발해 신북읍을 거치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사토를 농어촌공사 측이 무료로 인수하고 농어촌공사는 해당 사토로 노루목저수지를 매운다는 구상이다. 다만 해당 계획이 실현하려면 시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이 역시 개발계획의 일종이기 때문에 춘천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농어촌공사가 노루목저수지 성토를 검토하면서 춘천시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춘천시는 지난 2017년 6월 노루목저수지가 용도폐지된 이후 농어촌공사 측과 수차례 접촉하며 저수지 매입 등을 협의했으나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가장 큰 쟁점은 비용이다. 지난 2019년 감정평가 당시 노루목저수지 일원 8만 9900㎡의 감정가는 259억원으로 책정됐다. 춘천시가 검토하고 있는 매입 비용은 130억원 수준이다. 이 상황에서 성토가 이뤄지면 토지가 격은 300억원 이상을 웃돌게 된다.

춘천시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이재수 시장은 최근 농어촌공사 측과 만나 토지 매입 방안을 협의했다. 하지만 협의 이후 한 달이 다 되도록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이 시장은 “노루목저수지를 매입하겠다는 시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동면 노루목저수지는 지난 1957년 축조 당시 농경지 80ha에 농업용수를 공급했으나 2006년부터 인근에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저수지 기능을 상실, 2017년 6월 용도폐지됐다. 이후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오세현

농어촌 공 칠곡지사, '농촌 집 고쳐주기' 행복충전 활동 실시



© 스마트뉴스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지사장 손옥용)는 7월 15일 칠곡군 약목면 교리에 방문하여 행복충전활동 "사랑의 농촌 집 고쳐주기", 봉사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농촌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은 고령의 어르신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의 외부 재래식 화장실에서 양변기 화장실 및 샤워시설 설치를 진행하였다.

참여한 직원들은 모두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와 안전모를 착용하여 코로나 19예방과 안전 관리에 기하였으며, 잡초제거 및 집 마당에 산재되어 있는 폐기물을 수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남성태 약목면장은 격려차 현장을 방문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건네 주어 너무 큰 도움을 받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칠곡지사는 앞으로도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취약계층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스마트뉴스



© 스마트뉴스



© 스마트뉴스

"농촌다운 농촌 만든다"...고창군, '농촌다움' 사업 추진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15일 서울대 환경대학원팀 '농촌다움 평가 및 복원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전북 고창군은 14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고창군 농촌다움 평가 및 복원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 뉴스1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시대적 흐름과 노령화로 인한 변화된 농촌을 복원하기 위해 "농촌다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창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고창군 농촌다움 평가 및 복원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농촌다움은 농촌에 내재된 전통성과 지방성, 향토성 등 과거 농촌의 본 모습을 찾고, 생산과 정주공간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도시민을 위한 휴식·휴양의 공간으로서 농촌 본연의 역할을 말한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유기상 고창군수와 관련 부서장,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고창군 이장단 및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등 주민대표, 농업단체 대표, 고창군 5개 농협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고창군에 농촌다움이라는 개념을 지방정책에 선도적으로 정립하고 농촌의 본 모습을 찾기 위한 그 동안의 추진한 연구용역 과정과 앞으로 추진 할 과제와 계획 등을 공유했다.

용역을 맡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연구팀은 이날 △고창군 자원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GIS) △고창군 농촌다움 복원 대상지 도출 및 복원방향을 제시했다.

군은 연구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도 공모사업을 위해 추진중인 농촌협약과 연계하여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복원 사업 계획에 활용할 방침이다.

유기상 군수는 "농생명문화의 시원지 이곳 고창의 역사적 의미를 살리고 나아가 지역민의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지방정책에 선도적으로 농촌다움의 개념을 정립해 농업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핵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꼭 필요한 사업도..."경영평가 점수 깎여요" 거부하는 공공기관들

기사입력 2021-07-16 06:10

[편집자주] 땅투기 사태를 빚은 LH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선 줄곧 최상위 점수를 받았다가 결국 토해내게 됐다. 코로나 비상경영을 한 코레일은 경영관리 부문 최저등급을 받고 사장이 사표를 냈지만 공정한 평가를 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 와중에 경영평가 오류로 10개 공공기관의 평가등급이 뒤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경영평가제도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38년간 이어져 오면서 공공기관 종사자 수십만명의 성과급을 좌락꺾락하는 경영평가 제도의 실태를 들여다 봤다.

[[MT리포트]공공기관 저승사자, 경영평가의 속살 (下)]

"적자사업 했다간 성과급 떨어집니다" 꼭 필요한 사업도 기재부 눈치봐야하는 공공기관들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최근 5년 경영평가 등급

2016년	★ ★ ★ ★ ★	C등급
2017년	★ ★ ★ ★ ★	C등급
2018년	★ ★ ★ ★ ★	B등급
2019년	★ ★ ★ ★ ★	D등급
2020년	★ ★ ★ ★ ★	C등급

*자료: 기획재정부
그래픽: 이지혜 디자인기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했고 비용절감도 했다. 10년째 운임도 못 올리고 코로나19로 승객도 절반만 받았는데 경영관리에서 사실상 꼴찌 등급이 나왔다.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다."(코레일 관계자)

지난해 영업적자 1조원을 기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달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C 등급을 받았다. 배점 45점이 부여된 개별 사업부부분에선 전체 3위 수준의 높은 점수가 나왔지만 공통 평가 항목인 경영관리 각 항목별로 최하위 점수가 수두룩했다. 이 여파로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자

진 사퇴했다. 코레일은 호봉제에 따라 매년 1.9%의 임금이 자동인상되는데 평가 등급이 낮아 인상률이 1%가 채 되지 않을 전망이다. 사실상 연봉삭감을 당한 것과 다름없다.

경영평가단은 1조원대 적자의 불가피성을 감안, 재무적 평가에서 일부 보정을 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영관리 항목엔 이밖에도 자본생산성, 노동생산성 등 실적과 연계된 다른 항목도 많아 보정 효과가 제한적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창가쪽 승객만 받으면서 방역에 만전을 기했음에도 막대한 적자는 경영평가 점수를 끌어 내렸다. 코레일은 10년째 운임도 동결된 상태다. 여기에다 윤리경영 항목에서도 거의 '0'에 가까운 점수가 나왔는데 내부에선 "이유를 도통 모르겠다"며 껌껌이 경영평가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다.

부채규모, 부채비율 등 재무위험도 높아 성과급 하향조정 가능한 공공기관 10곳

- | | |
|----------------|-----------|
| ✓ 한국가스공사 | ✓ 한국석유공사 |
| ✓ 한국지역난방공사 | ✓ 한국철도공사 |
|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 대한석탄공사 |
| ✓ 한국광물자원공사 | ✓ 한국농어촌공사 |
| ✓ 한국산업단지공단 | ✓ 국가철도공단 |

*자료: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그래픽: 이지혜 디자인가자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는 코레일을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석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국가철도공단(옛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10개 기관을 '부채규모, 부채비율 등 재무위험도가 높다'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적자' 위험이 있는 기관에 '딱지'를 붙여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돈이 안되지만 정말 필요한 정책사업을 하려해도 해당 공공기관이 '돈 안된다. 그런 사업하면 경영평가 점수 깎인다'며 대놓고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와 반대로 흑자를 내는 공공기관은 여윌돈으로 경영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 외부 컨설팅까지 받는다. 이번에 일부 공공기관은 항공사나 입점업체 임대료와 사용료를 낮춰 코로나19 가점을 받았는데 이를 두고 다른 기관에선 "땅 짚고 헤엄치기 격"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공공기관 소속 정부 부처가 직접 하던 경영평가가 기재부 권한으로 넘어간 뒤 공공기관들의 기재부 '눈치보기'가 극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편일률적인 기관 평가로 인한 부작용도 작지 않다는 불만이 정부부처에서 터져 나왔다. 실제로 기재부는 131개 공공기관 직원의 성과급을 좌우하는 막강한 경영평가 권한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의 인사권까지 갖고 있다. 직간접적으로 예산권 행사도 가능한 만큼 공공기관들이 소속 부처보다 기재부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산하 공공기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해당 부처가 상세히 알고 있지만 기재부는 131개 기관을 모두 파악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획일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 공

정한 평가를 위해 차라리 예전처럼 소속 부처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말했다. 정부부처 한 관계자는 "'과'에 불과했던 기재부 해당 조직이 '공공정책국'으로 대폭 확대되는 등 기재부 권한만 커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LH 3년간 A등급' 평가 실효성 있나...8월말 개편안 나온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경영평가' 수정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기관 131곳 중 22곳의 평가오류를 발견해 수정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말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한다.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의 장본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년 연속 종합평가 A등급을 받으면서 경영평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커진 가운데 올해 6월 진행한 2020년도 평가에서 대규모 오류까지 발생하면서다.

정부는 경영평가 지표와 평가방식 등 두 축에서 전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공기관 수용가능성 △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 △국민 납득여부 등 적절성 등에서 균형점을 찾는다는 목표다.

15일 기재부에 따르면 경영평가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는 8월말 경영평가제도 개편안 발표를 목표로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경영평가 제도개선 TF는 지난 6월 발표한 2020년도 경영평가 결과에서 평가기관 131개 중 22개 기

관에 대한 점수오류가 발생한 이후 경영평가 제도 수정을 위해 출범했다. LH가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가 진행되고 윤리경영 점수 낙제점을 받은 상황에서도 3년 연속 A등급과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영평가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기재부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1984년 제도를 운영 후 38년만에 전면 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경영평가 제도개선 TF는 우선 평가지표를 단순화하고 기관 유형별로 맞춤형 평가지표를 적용하는 등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맞춰 평가 지표를 개편할 방침이다. 평가 방식도 기관별 평가방식에서 교차 평가방식을 도입하는 등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는데 주력한다. 공공기관 평가기간 연장과 기관장 평가 전담기구 신설, 인센티브 비중 조정 등 외부 목소리도 나온 만큼 검토할 전망이다.

이번 평가 오류에 대해선 평가위원 선정 기준과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평가지원전담조직 확대개편, 상설경영평가 전담기관 신설도 검토한다. 또 평가 대상 공기업이 경영평가 결과 확정·발표 전 평가 오류를 검증할 수 있도록 사전 검증 절차도 고려 중이다.

윤리경영 배점 확대와 사회적 물의시 0점 처리 등 LH 사태로 인한 경영평가 지표 수정작업도 이뤄진다. 특히 기재부는 오는 9월 공공기관 운영위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편람에 포함한 윤리경영지표 배점과 채점방식을 수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확정돼 공공기관에 배포한 경영편람 대로 평가할 경우 2021년도 경영평가에서도 윤리경영 여부와 무관하게 고득점 기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영평가 개선 TF를 통해 각계 의견을 듣는 단계"라며 "개편의 큰 방향은 공공기관 서비스질과 자율경영을 높이는 등 제도 경영평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거나 인센티브 제도를 바꿔야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듣고 있다"며 "공공기관 수용성과 국민 눈높이, 평가기관의 독립성·공정성 확보, 노동조합 의견 등을 고려해 경영평가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etc&oid=008&aid=0004617199>

'진짜 농사짓는 땅인가' 전국 농지이용 실태조사 시행

[고은지]



농림축산식품부

YONHAPNEWS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정부가 실제로 농사를 짓는 땅인지, 농지를 올바르게 소유하고 있는지 등을 살피는 "2021년 전국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오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만4천ha와 농업법인 이 소유한 농지 1만3천494ha를 처음 전수조사하는 것을 비롯해 모두 25만8천ha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 한도 등 농지 소유 요건을 준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 조사와 지도·점검을 병행한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여야 하며 주거 목적으로는 쓸 수 없다.

성토는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한다.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행위가 있으면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업용 시설 6천67개를 전수조사한다.

축사, 버섯 재배사, 곤충 사육사 등을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 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 조치를 하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농지법 위반사례가 많이 지적된 관외 거주자와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게 됐다"며 "농지가 투기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n@yna.co.kr

(끝)

법령에도 안맞는 '양도세 해석' 내놓고 따르라는 기재부

[김아사]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에 앞서 이억원 기재부 1차관 등 기재부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기획재정부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소득세법 시행령과 맞지 않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수차례 개정을 거듭하며 전문가도 손사래를 칠만큼 누더기 세법을 만들었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조문은 제대로 고치지 않아 법령에 안 맞는 해석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처럼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기재부의 유권해석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투자할 수밖에 없다. 세법 전문가들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해석보다 법이 우선돼야 한다고 현재 상황을 본말전도라고 지적한다.

법령과 동떨어진 유권해석 및 입장 내놓은 기재부

기재부가 법령과 동떨어진 해석을 내놓았다고 지적받는 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 관련이다. 주택 보유 기간 계산을 명시하는 이 법령은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투기 수요를 잡겠다고 2019년 개정해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는 법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김모씨[인천(9년 보유)과 서울(5년 보유)에 아파트 보유]의 사례를 제시한다. 2주택 모두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김씨는 인천과 서울 아파트를 올해 내 팔면 두채 모두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김씨가 강원도 원주에 3주택을 매입한 후 인천 집을 과세로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서울+원주) 상태가 된다. 그렇다면 서울 주택을 팔 때 2년을 기다리지 않고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이는 지난 12일 본지가 게재한 '양도세 줄이려 집 한 채 더 산다... 규제가 만든 '황당 절세법'' 기사에서도 언급한 내용.)

기재부의 답은 '서울 주택을 팔 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선 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이다. 기재부는 12일 설명 자료를 내 "2021년 1월 1일부터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에 대한 보유·거주 기간은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계산된다”며 “이 사례의 경우 서울주택의 보유·거주 계산 시점은, 인천 주택을 매도해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라고 했다. 기재부가 이 설명의 근거로 낸 것이 앞서 언급한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이다.

이 조항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는 규정이다. 한마디로 ‘최종 1주택만 남은 1세대가 이 법령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사례는 최종 1주택이 된 경우가 아니라, ‘일시적 2주택(서울+원주)’이 된 것이다. ‘일시적 2주택’은 보유 기간 계산을 ‘취득일’로부터 하게 돼 있다. 기재부는 법령에 ‘최종 1주택’이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일시적 2주택도 이 범주에 넣어서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은 보유 기간 계산법을 언급하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라고 밝히고 있다. 명시된 그대로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하라는 예외 규정이다. 그럼에도 일시적 2주택을 포함해 해석하는 것은 이 예외 조항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얘기가 된다. 본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해석을 위해 세법 전문인 변호사 5명과 세무사 5명에 자문을 구했다. 10명 모두 기재부의 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이 맞지 않는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투기 막기 위해선 법령 어긋난 해석도 괜찮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법조문이 애매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일시적 2주택이 사실상 1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를 동일하게 본 해석은 틀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이 말이 맞으려면 ‘일시적 2주택’을 예외로 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조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세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기재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원주 주택을 취득했다가 인천 주택을 매도한 경우, 서울 주택을 양도할 때 2년 기다림 없이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놔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실제 현실에서 국세청과 기재부의 해석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제까지 기재부가 내놓은 유권해석에 따르면 원주 주택을 ‘2021년 1월 1일 전에 취득했다가 인천 주택을 파는 경우’는 서울 주택 양도 시 보유 및 거주 기간 재계산을 하지 않는다. 즉,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원주 주택을 취득한 새로운 예에 대한 해석은 없었던 셈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이 경우도 형식적으로 ‘일시적 2주택’ 외형을 갖췄으므로, 서울 주택 매도 시 매도금액 9억원까지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다고 답하는 것이다. 실제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국세청 콜센터에 이 예제 사례를 상담했을 때도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설명 참고 자료’에도 같은 해석이 올라와 있다.

일각에선 세법 개정 취지가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투기 사례를 막는 쪽으로 과세하는 기재부의 말이 맞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이말이 성립하려면 다른 해석이 없도록 입법을 통해 법을 바꾸든지, 시행령을 고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법무법인 에이원 정재기 변호사는 “투기를 잡겠다고 법령에 맞지 않는 유추해석이 난무하게 되면 결국 또 다른 사례가 나와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탄소중립 위한 '그린 암모니아 협의체' 출범...민관 18개 기관 참여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생산-운송-추출-활용 전주기 기술개발 위해 연구계-산업계 '맞손'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그린) 암모니아" 전주기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계-산업계가 협의체를 구성, 협력을 강화에 나선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출연연,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18개 기관은 "그린 암모니아 협의체"를 출범했다.

협의체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그린 암모니아의 생산-운송-추출-활용의 전주기 기술 개발 협력을 위해 국내 최초로 결성됐다.

국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수소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외 그린 수소 도입이 필요하며, 암모니아는 현재 가장 유력한 수소 캐리어로 고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보고에 따르면 그린 암모니아는 수소 캐리어 및 무탄소 연료로 탄소중립 시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암모니아는 액화수소와 달리 상온에서 쉽게 액화되며 액화수소 대비 단위 부피당 1.7배나 수소 저장용량이 커서, 전 세계적으로 운송 수단 및 유통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은 지난 2019년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해 그린 암모니아 협회를 구성하고, 경제산업성 산하에 암모니아 에너지 이사회를 만들어 암모니아 연료 사용에 대한 주요 정책 제언을 추진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그린 암모니아 생산 및 활용 사업화를 추진 중이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18개 참여기관이 국내 기술로 그린 암모니아 생산-운송-추출-활용 산업의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저변 확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협력 기술로는 저가 그린 암모니아 생산, 운송 및 선박 연료 활용, 그린 암모니아 수소추출을 통한 수소공급, 가스터빈, 보일러, 전소-혼소 발전, 연료전지의 무탄소 연료 활용 등이 될 방침이다.

아울러 그린 암모니아를 안전하게 생산-운송하고 활용하기 위해 암모니아 전주기에 대한 안전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그린 암모니아 협의체 협약식을 시작으로 긴밀한 정보교류와 적극적 협력 연구를 통해 국내 기술로 그린 암모니아 전주기 가치사슬을 완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 실장은 "암모니아 협의체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수소경제를 위해 그린 수소를 활용한 다양한 운송-저장 매체 기술개발을 위해 정부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며 연구계와 산업계가 상호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잇단 공직자 부정부패 뿌리 뽑겠다”... 권익위, 칼 빼들었다

[김영선]

무관용 엄벌... 이달부터 신고 기간

청렴도 측정 체계도 전면 개편 착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이해충돌, 채용비리 등 공직사회의 각종 부패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공직자의 낯술 사건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공군 내 성추행 사망사건 은폐 의혹 등 정부 임기 말에 잇달아 발생한 공직자 기강해이 사례를 계기로 부패 뿌리 뽑기에 나선 것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공직사회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반부패정책을 총괄하는 권익위원장으로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부패 관행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휴가철, 추석 명절을 맞아 이달부터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기로 했다. 직무 관련 금품수수, 부정청탁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수사의뢰, 징계요구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가족 부정채용을 비롯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행동강령 이행 여부도 점검하는 한편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채용비리 실태 조사도 올해는 채용 관련 금품수수, 채용심사 과정의 이해충돌 회피 여부 등을 예년보다 강도 높게 점검할 예정이다.

청렴도 측정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금품수수, 알선, 청탁 등이 중심이었던 기존의 청렴도 평가기준에 이해충돌과 부정한 사익추구 등 새로운 부패유형을 포함시키고, 공직자의 성비위 사건도 평가 감점사항에 반영할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각 부처에서 공직 기강 해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자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총리는 지난 7일 공직기강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지시했다. 기존의 공직기강 확립방안과 달리 오는 19일부터 내달 1일까지 기간을 특정해 집중 점검하고, 기관장 책임하에 복무관리를 강화하며 금품수수 등 전통적 비위 적발뿐 아니라 갑질 등 새로운 비위 유형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직장 내 갑질 금지법' 시행 2년..."사각지대 많아 한계"

[송은경]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시행 2주년을 맞은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나 고용 형태 등 이유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한계가 뚜렷하다는 노동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5일 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김유경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일터 민주주의 구현'과 '노동자들의 인권 존중'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김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각지대의 사례를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 가해자와 소속이 다른 하청·용역·위탁노동자 ▲ 가해자가 사용자의 친인척인 가족회사 ▲ 노동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4가지로 분류했다.

그는 "모든 사례를 합치면 일하는 사람의 최소 절반 이상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셈"이라며 오랜 시일이 걸리는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시행령을 개정하면 문제점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 고용 형태·법적 지위 등을 불문한 노동부의 직접조사 ▲ 직장갑질 반복·피해자 다수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노무사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법에서 사용자 친인척 갑질에 관한 제재 조항 등을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법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다"며 "일터에서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전담하는 "직장갑질119 교육센터"를 출범시켰다. 3년 8개월간 제보 사례가 담긴 "공공기관 직장갑질 종합 매뉴얼"을 발행하고 다음 달 1일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를 활용한 조직문화 진단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norae@yna.co.kr

(끝)

행안부, 지역균형 뉴딜 15개 사업 선정... 재정인센티브 지급

[임철영]

행정안전부가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를 통해 15건의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의 조기 성과 창출을 도모하고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대국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난 3월 24일부터 한달동안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공모한 결과 161개 지자체에서 총 252건의 지역균형 뉴딜사업이 제출됐다. 행안부는 1차 서면심사에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를 통해 2차 온라인 대국민투표를 실시했다. 투표에는 광화문1번가 개설 이후 최대 인원인 2만 3689명이 참여해 24건의 우수사업이 선정됐다.

2차 대국민 투표를 통해 선정된 24건의 사업은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경진대회에서 지자체의 사업 발표에 대한 전문가(50%)와 시도대표단(50%)의 심사를 거쳤다. 행안부는 최종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15개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7월 말에 재정 인센티브(300억원)를 지원해 지자체가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마중물이 되게 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의 '드론으로 여는 새로운 세상! 드론하이웨이 조성' 사업은 드론산업 관련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관제상황실·드론스테이션과 대전 3대 하천에 드론 하이웨이 구축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드론서비스 실증사업을 통해 도심환경·밤길·시설물 위험요소 등 재난 사전예방과 드론 강소기업 지원 육성 및 드론서비스 발굴 등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대전광역시를 드론산업 메카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상북도의 '축분기반 BIO-REFINERY 산업 육성' 사업은 타 지역 대비 산지는 많고 평야가 적은 지역특성으로 인한 가축분뇨의 퇴비화 여건 열악 및 축산농가의 퇴비화 공간 부족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축산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축분 고체연료 제조설비 구축 및 가축분뇨 고체연료 전용보일러 보급 등을 통해 농가 온실가스 감축 및 토양 부영양화 해소 등 녹색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해철 장관은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는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해 지역균형 뉴딜의 조기 성과 창출 및 지역경제 혁신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정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함께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촌 쓰레기 문제, 누가 해결해야 하는가?



농업마당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동소장

도시사회 문제를 연구할 당시 쓰레기 문제에 집중한 적이 있었다. 1990년대 초반이고 김포매립지가 처음 생겨나 재활용품이 섞여 반입되는 것을 주민들이 강하게 점검하고 구청마다 ‘쓰레기 대란’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던 시기였다. 또 쓰레기는 ‘지자체 자체 처리 원칙’이 결정되어 소각장이 적극 검토되고 주민들의 소각장반대운동이 아주 활발하기도 하였다. 1995년에 이루어진 행정구역 개편에서 도시가 인근 농촌 지자체를 흡수하여 통합하는 것도 결국에는 쓰레기 문제 해결 때문이라는 말도 나돌았다.

생태학적으로 도시는 농촌에 ‘기생’하는 존재라는 것을 결국 알게 되었다. 도시에 필요한 농산물은 물론이고 물과 에너지 등 필요한 물자는 모두 농촌에서 가져오고, 반대로 쓰레기는 모두 농촌에 갖다버리는 셈이다. 그렇게 버리는 쓰레기도 지자체 행정이 당연히 바로바로 치워줘야 한다고 시민들은 생각했다. 도시 생활에 필요한 도로나 지하철, 상하수도 등의 인프라는 계속 정비되어야 하고, 그 또한 국가가 당연히 해줘야 할 역할로 생각했다.

이제는 농촌에도 쓰레기가 넘쳐난다. 근대화와 경제성장 과정을 거치며 농업의 공업화, 농민의 소비자화, 농촌의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된 결과이다. 농업 생산과정은 대량생산을 위한 단작화, 기계화, 화학화도 병행되어 공업적으로 변했다. 생산자 농민도 농산물을 자급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먹거리를 마트에서 사먹는 소비자와 유사해졌다. 이런 변화과정에서 농촌은 스스로의 장점을 잃어버렸고 주민들

의 생활양식은 도시를 닮아 왔다. 겉으로 보이는 풍경은 농촌임에 분명하지만 어딘가 농촌답지 않은 모습이 넘쳐난다. 농촌 체험을 위해 방문했던 도시민들이 하루 이틀 생활해보면 이런 점을 금방 간파한다. 가장 쉽게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농촌의 쓰레기 문제인 셈이다. 농가 주변은 물론이고 논밭이나 하천, 도로변 곳곳에 쓰레기가 넘쳐나기 때문이다.

농촌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누구의 책임인가? 지난 7월 9일, 마을학회가 주관하는 35차 월례세미나의 주제는 ‘농촌 생활환경과 쓰레기’였다. 이 자리에서 진안군 봉곡마을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10여년 전부터 마을에 분리수거장을 자발적

농촌도 넘쳐나는 쓰레기에 골치 농업방식·생활양식 변화 불가피 영농폐기물은 국가가 대책 세워야

로 설치하고 부녀회가 관리하며 판매 수익금으로 연간 100만원 정도의 마을자치기금을 모으는 마을이다. 또 늦게 시작했지만 판매 수익금을 독거노인 반찬나눔 기금으로 잘 활용하는 홍성군 두리마을 사례도 발표되었다. 그리고 환경운동 일환으로 주민교육과 시범사업을 열심히 실천해온 예산환경운동연합 사례, 분리수거 실태를 조사하고 면 단위 모델을 검토중인 홍성군 장곡면 주민자치회 사례, 마지막으로 농식품부 농업환경실천프로그램 일환으로 영농폐기물을 수집하고 분리수거하는 홍성군 도산2리 사례도 발표되었다. 하지만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 현실에서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도 많이 제기되었다. 몇 가지 정리된 이야기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의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한데 글을 모르는 어르신까지 고려하여 좀 더 농촌 현실

에 맞도록 다양한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행정이 만드는 안내책자는 너무 어렵고 현실과 맞지 않다. 이해하기 쉬운 영상물을 많이 만들고, 좋은 강사도 많이 양성해야 한다. 행정도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둘째, 지자체는 너무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면 단위 실정에 맞게끔 자원순환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쓰레기 감소(Reduce)를 우선하고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쓰레기가 돈(마을기금)이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행정리 단위, 읍면 단위의 역할분담도 명확해질 수 있다. 그 이후에 지자체의 청소행정과 맞물려 수집과 폐기의 경로를 따라 외부로 반출되어야 한다.

셋째, 농촌 면 단위마다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와 판매를 담당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례 발표자들은 마을 가까이 ‘고물상’이 하나쯤 있다면 훨씬 편하게 활동할 수 있고, 노인이나 청년 일자리와 연계한다면 사회적기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사회적기업이 도로변 제초 작업이나 가로수 관리, 꽃가꾸기 등의 행정사업까지 대행한다면 충분히 지속가능하고, 농촌의 환경지킴이 역할도 감당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에서 충분히 논의해볼 만하다.

물론 농촌 쓰레기 문제는 현재의 농업방식과 주민 생활양식의 변화 없이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렵다. 특히 영농폐기물 문제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대책을 세워야만 한다. 생산을 규제하고 수집가격을 높여야 한다. 주민들은 쓰레기 문제가 어렵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봉곡마을), ‘10년을 내다보고’(두리마을) 계속 해나갈 요량이라 한다. ‘다함께 대청소하며 주민들 사이의 우애도 생기고 좋은 귀농귀촌 교육도 된다’(도산2리)며 즐거워한다. 이런 노력에 국가와 행정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간단한 문제 하나도 잘 해결되지 않는 것이 농촌 현실이다.

대세로 자리잡은 'ESG'

AFL칼럼

박 유 신 부국장



어느덧 농업부문에 있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대세가 됐다.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단어다. 친환경, 사회적 책임경영, 지배구조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기업경영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를 가리킨다.

즉 기업경영에 있어 주주의 가치만을 대변하는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그 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미 2019년 8월 아마존, 애플 등 미국 200

대 주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협의체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이 주주의 단기적 이익보다 기업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을 선언한 바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2050년까지 창립 이래 배출한 탄소를 모두 상쇄시키겠다는 탄소마이너스 선언을 발표했다. 세계 2위 석유회사인 BP,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미국의 블랙록 등 세계적인 기업체들도 ESG 경영을 선포했다.

국제 사회에 있어서도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인권 및 환경실사 의무 강제 법률' 제정, 지배무정보 의무공시 등 ESG경영을 제도화하고 의무공시 확대 등 관련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비전을 선언하고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으로 ESG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포스코, LG화학, SK그룹 등 대기업들도 앞다퉈 ESG 실천 의지를 밝히며 실천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ESG가 주목을 받게 된 데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 현실화되면서 기업들로서는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대해 고민하게 됐고 기후 변화를 넘어 위기로까지 불거진 환경문제의 해결은 결국 자연스레 국내·외적으로 ESG를 고려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ESG는 물질적 성취를 최고 가치로 여기던 물질만능주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삶을 질을 추구하고 환경 등 비물질적 가치를 추구

하자는데 있다. 그런 측면에서 농업은 어쩌면 ESG와 가장 맞닿아 있는 산업이다. 환경보전, 경관 유지, 지역사회 유지 등 그동안 농업이 생산활동 이외에 수행해 왔던 가치가 ESG이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농업 관련 기관과 기업체들이 속속 ESG를 선언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농업·농산업계에 있어 추구해야 할 ESG는 무엇일까. 아직은 환경부문에 초점을 둔 ESG 실천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정부와 농업·농산업계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개인적으로는 환경(E)부문에서는 농업·농어촌공간을 탄소중립 실현의 장인 친환경 저탄소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라 본다. 이는 장기적으로 농업·농어촌을 유지·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사회(S)부문에서는 안전하고 행복한 삶, 즉 삶의 질이 보장되는 농어촌을 만드는 일이다. 지배구조(G)부문에서는 투명한 경영과 부패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농업인과의 소통 창구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농업·농촌의 문제는 대내외적인 환경변화 속에서 이제 몇몇 단편적인 정책이나 제도를 개선해서 대응할 수준을 넘어섰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총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과 혁신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EGS 실천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면 농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혁신에 EGS가 녹아들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다시금 농업의 가치를 되새기길 기대한다.

• yusinya@aflnews.co.kr

서울경제

2021년 7월 16일 금요일 A01면 종합

기업들 탄소국경세만 최대 9,000억 '초비상'

EU 2026년부터 도입 공식화

유럽연합(EU)이 오는 2026년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국경세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EU의 탄소국경세는 철강·알루미늄·비료·시멘트 등에 우선 적용되지만 석유화학·선박 등으로 확대되면 EU에 납부해야 할 금액만 7,000억 원에서 9,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관련 기사 4·19면

EU 집행위원회는 14일(현지 시간) 기후변화에 대응해 2050년까지 '탄소

철강·시멘트 등 우선 적용
석유화학·선박으로 확대
전기차 전환 부담도 커져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규모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제안했다. 역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지난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 위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 2035년부터 EU 내 신규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EY한영은 2019년 기준 EU 수출이

많은 국내 9개 업종에 톤당 75달러의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2030년에 6억 1,880만 달러(약 7,1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길 것으로 추정했다. 톤당 100달러의 세금이 부과되면 부담액은 8억 2,510만 달러(약 9,490억 원)로 늘어난다.

특히 탄소배출이 많은 철강 업종이 부담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의 경우 톤당 75달러의 탄소세가 부과되면 수출액의 12% 이상을 탄소세로 납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철강 업계의 영업

이익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EU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한 만큼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로 전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자동차는 2040년까지 유럽·미국·중국 등 핵심 시장에서 전면적인 전동화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번 EU 발표로 완전 전동화 시기를 앞당길 수밖에 없게 됐다. 내연기관 부품을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구조조정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김봉현 기자 nhkimchn@sedaily.com

언론, 기후변화 대응에 어떤 기여하고 있나



지현영
사단법인 두루변호사

BBC 퓨처플래닛, 기사·보도과정
탄소배출량 점검하며 자기검열
언론·학계 결합해 공동연구도
지속가능 언론에 대한 솔루션 기대

언론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행사 열풍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들린다. 수많은 언론이 ESG 경영의 길잡이를 자처하는데, 기업평가와 시상을 핑계로 영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이다. 보통 길잡이라 하면 길을 잘 아는 사람을 일컫는데, ESG 경영을 잘 실천하는 언론이 있는지, 그중에서도 기후변화에 관한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졌다.

2019년 결성된 '커버링 클라이밋 나우(Covering Climate Now)'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보도를 늘리자는 취지의 글로벌 이니셔티브이다. 세계 곳곳의 460여개의 언론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동아사이언스가 유일하다. 동아사이언스는 2020년 1월 호주 산불을 유발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움직임을 촉구하는 전문가와의 인터뷰 기사를 자세히 다뤘는데, 이는 '커버링 클라이밋 나우'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는 국내 언론 사례는 찾기 어려워 BBC 퓨처플래닛(Future Planet)이라는 선구적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BBC 퓨처는 복잡다난한 사회에서 자동 반응적인 기사를 지양하고, 증거에 기반한 분석과 깊이 있고 강력한 스토리텔링을 지향하는 미디어 웹사이트이다. BBC 퓨처의 한 섹션인 퓨처 플래닛은 세계 곳곳의 환경문제에 대해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취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여기까지라면 퓨처 플래닛은 기존에도 있어 온 꽤 괜찮은 환경 간행물과 크게 다른 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퓨처 플래닛은 기사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과정에도 주목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저널리즘이 배출하는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독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책무가 있다고 밝힌다. 이에 퓨처 플래닛의 모든 기사에는 그 기사를 보도하고 발행하기까지 배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탄소배출량이 표시된다.

퓨처 플래닛은 크게 보아 두 측면에서 탄소를 배출하는데, 취재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교통수단에 따른 배출량과 발행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기반시설에서의 배출량이다. 교통수단에 따른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퓨처 플래닛은 기사를 기획할 때부터 어느 정도의 배출이 불가피한가를 고려한다. 비행기를 타지 않는 것은 가장 강력한 감축수단이다. 이들은 14시간 정도를 소요해 런던에서 남아공의 케이프타운까지 편도 비행기를 타게 될 경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평균적인 가정에서 100일 정도 사용하는 전기량에 맞먹는다고 비유한다. 이들은 지역의 기자 또는 취재원과 함께 능률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통해 적은 탄소배출량으로 세계 곳곳의 소식을 생생하고 다양하게 담는다.

기자는 취재의 시작부터 끝까지 탄소배출량을 고려하며 자기검열을 하게 된다. 디지털 탄소발자국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에 데이터를 보내고 전력을 사용함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측정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독자수에 대한 감안이 중요한데, 이들은 사용자가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휘수(화면)를 기준으로 활용한다고 한다. 독자가 기사를 읽는 방식에 따라 사용되는 에너지양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휴대폰을 통해 읽게 되는 경우 노트북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가 사용된다. 독자들이 위치한 지역의 탄소집약도도 큰 차이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요소 때문에 디지털 탄소발자국은 추정치일 수밖에 없고 이에 퓨처 플래닛은 범주를 제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디어의 탄소배출량에 대한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언론과 학계가 결합해 연구를 진행하는 사례도 있었다.

퓨처 플래닛은 그들이 취재한 스토리가 해결책에 관한 것인 만큼, 그들이 투명하게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공개하는 방식이 지속가능한 언론에 대한 솔루션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하는 언론은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유일하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전환하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렇게 실천에 기반한 주장에는 힘이 실린다.

부산일보

2021년 7월 16일 금요일 011면 월드

환경 파괴의 뼈아픈 대가... '지구의 허파' 아마존 병들다

아마존 과학 위원회 첫 보고서
동·식물 수천 종 '멸종 고위험'
불법 벌목 등에 숲 18% 없어져
동남부는 탄소 배출원으로 전락
기후변화+숲 파괴로 재앙 위기
10년 내 '산림 황폐화' 중단해야



숲 파괴와 산림 황폐화로 인해 아마존 열대우림 일부 지역이 탄소 배출원으로 전락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20년 8월 16일 브라질 파라주 노보 프로그레소 남쪽에 있는 아마존 열대우림에 대형 화재가 발생한 모습. AFP/로이터

'지구의 허파'로 꼽히는 아마존 열대우림이 숲 파괴와 산림 황폐화로 인해 동·식물 1만 여 종이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은 탄소 흡수원에서 탄소 배출원으로 전락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마존 열대우림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모임 '아마존 과학 위원회(SPA)'는 아마존 우림의 계속된 파괴로 토착 식물 8000여 종과 동물 2300여 종이 멸종 고위험에 처해 있다는 첫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SDSN)의 후원을 받아 결성된 SPA는 아마존 과학자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아마존 열대우림의 현 상황을 가장 상세히 평가한 것으로 제시됐다.

보고서에는 아마존 우림의 숲 18%가 개간과 불법 벌목 등으로 이미 파괴됐으며, 17%는 황폐해져 숲 기능이 떨어졌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고서는 앞으로 10년 안에 숲 파괴와 산림 황폐화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책 제언

을 하면서 이미 파괴된 숲을 복원하는 것도 병행할 것을 강조했다. 브라질대 메르세지스 부스타만치 교수는 SPA 성명을 통해 "과학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등을 포함한 복합적 위기로 인류가 되돌릴 수 없는 재앙적 위기에 당면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아마존의 운명은 지구 위기 해결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숲 파괴 등으로 인해 아마존 우림의 일부 지역에서 배출하는 탄소가 흡수량보다 많아졌다는 별도의 연구 결과도 나왔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 루시어나 가치 연구원이 이끄는 연구팀은 지난 2010~2018년 지구 대류권의 대기

시료를 채집해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 얻은 결과를 과학 저널<네이처>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아마존 네 곳에서 지면부터 4.5km 상공까지 약 600개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서부보다는 동부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 것을 확인했다. 특히 아마존 동남부에서는 탄소 배출량이 흡수량보다 많아지며 탄소 흡수원에서 배출원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기가 길어지고 숲이 파괴되면서 잦아진 화재와 지역 생태계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인간 활동으로 빚어진 기후변화와 숲 파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아마존의 탄소 균형과 생태계에 지속

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브라질은 농경지와 목초지를 확보하기 위한 무단 벌채와 고의 방화가 계속되는 아마존 열대우림에 군병력 3000명을 재투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투입되는 군 병력은 8월 말까지 활동하고 필요하면 연장될 방침이다.

INPE에 따르면, 전체 아마존 열대우림 가운데 브라질에 속한 '아마조니아 레가우'에서 올해 상반기에 파괴된 면적은 3300여㎢에 달했다. 지난달에만 2308건에 이르는 화재가 관측되기도 했는데, 이는 6월 기준으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

기 고

2050 탄소중립 위한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은 대세가 됐고, 최근 우리나라도 기후행동 강화 의지를 천명하였다.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는 이제 인류 공통의 목표이자 국가 차원의 약속이 됐다.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 산림은 현재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육상의 가장 중요한 탄소감축원이다.

그러나 산림, 즉 육상의 ‘그린카본’ 만으로는 탄소중립 실현에 한계가 있다. 대안은 바다의 ‘블루카본’이다.

블루카본은 그린카본에 비해 탄소흡수 속도가 최대 50배 빠르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육상의 무성한 산림만큼 바다에도 광활한 갯벌(염습지)이 있다. 필자는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 서해를 포함한 황해갯벌(약 1만9000km²)을 ‘세계 제일의 갯벌’로 주창해왔다. 2009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유럽 와덴해갯벌(약 4700km²)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서해갯벌은 세계적 수준의 해양생물 다양성과 일차생산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더욱 크다. 그러나 서해갯벌은 지난 반세기 동안 과도한 연안개발로 그 면적이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지난 40년간 지속된 대규모 간척사업과 매립은 갯벌 본연의 탄소감축 능력을 크게 훼손한 셈이다. 2010년대 초반 ‘생태복원’이란 화두가 재조명되면서 해양수산부는 갯벌복원 정책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2019년에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갯벌법)’도 지정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전면적인 갯벌 보호정책이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까지 블루카본 대상지인 전국 20여 곳의 총 4.5km²의 갯벌을 복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0년간 잃어버린 갯벌에 비하면 작은 면적이지만 언젠가는 과거의 광활했던 서해갯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김 종 성

서울대 교수
(지구환경과학부)



기대감이 커지는 요즘이다.

갯벌복원사업은 수산자원 확보, 생물 다양성 증진, 생태관광 활성화와 같은 다양한 부문에서 갯벌의 생태계서비스를 증진시키는 기후변화 대응의 토털 솔루션이다.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향후의 갯벌복원사업이 탄소중립 실현의 한 축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즉 탄소중립 시대에 있어 갯벌 역할의 중요성은 이산화탄소 흡수능력을 증진시키는 갯벌조립(염습지화)에 있다는 것이다. 미국, 유럽, 호주, 그리고 홍콩 등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근 연안에 염생식물 서식지를 조성하여 탄소흡수력을 증진시키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이 한창이다.

갯벌 상부에 서식하는 염생식물은 육상의 나무와 비교하여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데 있어 비용 대비 그 효과가 매우 크다. 또한 갯벌조립 사업은 염생식물의 식재 이후 추가관리가 거의 필요 없어 육상조립 사업에 비해 편익이 월등하게 크다. 탄소중립의 길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대세이자 극복해야 할 숙명이다. 2030년 탄소저감목표 상향을 위해 적극적인 실천과 담대한 도전이 요구되는 지금 갯벌에 더 많은 갈대와 칠면초를 심는 것부터 당장 시작해야 한다. 갯벌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자연유산이면서 동시에 탄소중립의 중요한 대안임을 기억하자.

오늘의 날씨

자세한 정보는 weather.mk.co.kr

16(금)

소나기도 막지 못한 폭염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5도, 낮 최고기온은 27~33도.



세계날씨

지역	16(금)	17(토)
뉴욕	소나기 23~29	구름 조금 25~30
LA	구름 조금 17~19	구름 조금 17~19
베이징	소나기 24~30	흐리고 비 23~28
도쿄	소나기 22~28	소나기 23~29
홍콩	소나기 28~32	소나기 28~33
방콕	흐리고 비 26~29	흐리고 비 26~29
모스크바	구름 조금 21~32	맑음 20~30
런던	구름 조금 15~21	맑음 13~23
파리	맑음 16~22	구름 조금 16~20
로마	맑음 16~28	소나기 16~27
카이로	맑음 25~38	맑음 26~39
시드니	맑음 11~19	맑음 11~17
상파울루	맑음 14~24	흐림 14~18
싱가포르	맑음 27~33	맑음 26~31
토론토	소나기 19~29	소나기 17~25

지역별 주간 날씨

지역	17(토)	18(일)	19(월)	20(화)	21(수)	22(목)
서울·경기	☁️ 25/32	☀️ 24/32	☀️ 24/33	☁️ 25/34	☁️ 25/34	☀️ 25/34
영동	☁️ 23/30	☀️ 24/30	☀️ 24/31	☁️ 24/33	☁️ 24/33	☀️ 25/33
충청	☀️ 24/31	☁️ 24/32	☁️ 25/32	☀️ 25/34	☀️ 25/34	☀️ 24/34
호남	☁️ 23/32	☁️ 24/32	☁️ 24/32	☀️ 25/34	☀️ 24/34	☀️ 24/34
영남	☁️ 21/30	☁️ 22/31	☁️ 22/31	☁️ 22/32	☁️ 22/33	☁️ 22/34
제주	☔️ 25/30	☔️ 25/31	☔️ 26/31	☁️ 26/33	☀️ 26/33	☀️ 25/33

오늘의 간조·만조

지역	간 조	만 조
부산	06:02/18:33	00:02/12:31
인천	02:37/15:12	08:43/21:07
울산	05:12/17:50	11:51/23:52
목포	11:40/23:51	06:25/18:43

지역	풍향	풍속	파도
서해중	남동~남	3~5㎞	0.5m
남해서	동~남동	5~8㎞	0.5m
동해남	동~남동	3~6㎞	0.5~1.0m

서울신문

인사

■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이북5도 함경남도 사무국장 제현탁
■ 해양수산부 ◇국장급 승진 △해사안전국장 명노현◇과장급 전보△감사담당관 이상문△해양정책과장 김용태
■ 방위사업청 △무인계약팀장 김석
■ 산업은행 ◇중소중견금융 부문 [단장]△네트워크지원실 유원채△충청지역본부 양재권 [팀장]△네트워크지원실 이석준△서초 조두일·곽은주△잠실 정세복△잠원 김태현△하남 최치영△마포 박혜원△여의도 정옥립△영업부 서영진△종로 김순덕△부천 김용준·김태구△송도 신인우△시화 최형욱△안산 김완식△인천 이종윤△분당 조용호△용인 장지우△원주 배선태△평택 장희철△부산 김정현△양산 문성원△구미 손현숙△울산 조현갑△대전 강봉구·윤병훈△아산 신공철△오창 김근식△광주 박성윤△군산 유현△목포 장준양△여수 이도권△전주 김현구 ◇기업금융 부문 [팀장]△산업·금융협력센터 유현진·이희동△기업금융3실 이윤진 ◇글로벌 사업 부문 [팀장]△무역금융실 박은숙·김선영 [해외 주재원]△상하이 김철희△베이징 최동묵△홍콩 신보람△유럽 이수복△브라질 이창훈 ◇자본시장 부문 [팀장]△PE실 전승하 ◇심사평가 부문 [팀장]△신용평가부 정수진 ◇리스크관리 부문 [팀장]△리스크관리부 이송준·박윤준·유명환△금융결제부 김좌진·민경수·유영아 ◇정책·녹색기획 부문 [팀장]△재무기획부 이은정 ◇경영관리 부문 [팀장]△총무부 조란숙 ◇벤처금융본부 [단장]△벤처기술금융실 제정용 [팀장]△스케일업금융실 성혁준 ◇해양산업금융

2021년 7월 16일 금요일 025면 사람들

본부 [팀장]△해양산업금융실 이동훈 ◇구조조정본부 [팀장]△기업구조조정3실 손우성 ◇기간산업안정기금본부 [팀장]△기금운용국 이춘원 ◇자금시장본부 [팀장]△자금부 홍석기△금융공학실 김기훈 ◇PF본부 [팀장]△PF1실 김종철 ◇연금신탁본부 [팀장]△연금사업실 이동주 ◇DT본부 [팀장]△IT기획부 이성엽△코어금융부 곽지현△디지털금융부장관일 △디지털전략부 최은미 ◇KDB미래전략연구소 [팀장]△미래전략개발부 최현희△산업기술리서치센터 장인우△한반도신경제센터 장명수 ◇준법감시인 [팀장]△윤리준법부 조용훈 ◇정보보호부 [팀장]△정보보호부 송미정

■ 수출입은행 ◇선임△프로젝트금융본부장 김형준△경협사업본부장 박종규

■ 국토안전관리원 △부원장 겸 재난안전본부장 강부순△기반시설본부장 신원규△건설안전본부장 권혁기△생활시설본부장 이종우△안전성능연구소장 김동희△감사실장 강영구

서울신문

2021년 7월 16일 금요일 025면 사람들

부고

- 정순월씨 별세 조성훈(캐나다 거주)·조성준(블룸버그통신 사진기자)씨 모친상 안수경(밝은미소치과 실장)씨 시모상 15일 광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17일 오전 7시 30분 (062)231-8903
- 조상현(광주 광산구의원)씨 별세 15일 광주 만평장례식장, 발인 17일 오전 (062)611-0000
- 이성희씨 별세 정희용(국민의힘 국회의원)·정선용(골드엠 대표)씨 모친상 김성희·유희경씨 시모상 15일 칠곡군농협연합장례식장 왜관성당, 발인 17일 오전 10시 (054)976-9988